

# 동북아 경제통합을 이끄는 한·중·일 연합\*

## -유럽통합의 독·불 연합 사례로부터 얻는 교훈-

정상희 · 이종원 · 황기식

동아대학교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 수원대학교 무역학과

동아대학교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독·불 연합으로부터의 교훈 |
| II. 유럽통합 과정에서의 독·불 연합 | V. 결론              |
| III.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 협력   |                    |

Key words(중심용어): 독·불 연합(Franco-German Coalition), 슈망선언(Schuman Declaration), 동북아 협력(North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한·중·일 연합(China-Japan-Korea cooperation)

### 국 문 요 약

본고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독·불 연합의 사례를 통해 미진한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협력에 기반한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 추진이 후발국가들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며, 지역경제협력 실현도 가능할 것임을 제시한다.

본고는 동북아 지역 경제 협력과 관련해 유럽통합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검토하는 데 주목적을 갖고 있으며 특히 유럽통합 과정에서 추동력과 추진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독·불 연합으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독·불 협력체제와 유사한 동아시아 양국협력체제의 구축은 동북아 각국에서 적절한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경제개혁을 앞당기는 원동력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외부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한국국제상학회가 2009년 7월 중국 로동대학에서 개최한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 및 보완한 논문임을 밝힙니다.

## I. 서론

독·불 연합<sup>1)</sup>은 유럽경제공동체(EEC) 초기부터 유럽통합을 이끌어 온 추동력이었다. 유럽통합이 가능했던 것은 독·불 양국이 유럽 각국의 이해가 합치되도록 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 통합의 초기형태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이 그랬고 유럽경제공동체(EEC) 창설 역시 그랬으며, 각종 조약과 동맹이 그런 맥락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2차 세계 대전의 큰 전쟁으로 감정의 골이 깊은 독·불 양국의 화해와 협력은 거의 4세기에 걸쳐 반복된 중부 유럽에서의 계속된 충돌을 끝맺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겨졌고, 다른 유럽 국가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유인으로 작용했다.

물론 유럽통합이라는 목표는 같았지만 양국 간의 이해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했다. 먼저 1·2차 세계대전 등 독일과의 대규모 전쟁에서 계속 폐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프랑스의 경우 항구적인 평화정착의 길로 유럽통합을 구상했다. 프랑스의 드골(Charles de Gaulle)은 유럽경제공동체를 프랑스 대외정책의 한 기본 축으로 정착시키면서, 경제적 통합 영역, 정치적 통합 영역, 그리고 새로운 회원국 가입문제를 포함한 주요 회원국과의 관계에 관한 영역으로 나누어 추진하였다(Tacel 1989, 232-233). 프랑스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성공해 평화와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독일을 배척하기보다는 유럽통합과정 최고의 협력자로 보고 우호관계에 바탕을 둔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프랑스는 독일과의 화해와 협력을 천명하고, 유럽통합을 위한 동반자로 나서 줄 것을 제안했다.

전범국가로서 유럽외교에서 고립될 위기에 있던 독일에게 있어서도 프랑스의 유럽통합 협력 제의는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독일은 프랑스 주도의 유럽통합 움직임에 협력하는 것을 국제사회 복귀의 방안으로 인식했다. 이에 1950년 프랑스의 외무장관 로베르 슈망(Robert Schuman)이 EU의 태동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독일 측에 제의했을 때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수상은 거리낌 없이 동의했다. 아울러 독일은 유럽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 자국의 과오를 씻어내고 전범국이 아닌 협력국으로서 우호적인 입장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섰다.<sup>2)</sup>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으로 획득한 경제력을 유럽통합에 필요한 공공재 창출 및 유지에 투자했다. 또 역내 자유무역 활성화를 위해 상품 서비스 노동시장을 개방하고 역내 사회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럽구조기금을 최다 출연했다.

결국 독·불 양국의 화해와 협력 관계는 유럽통합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를 했고, 여전히 유럽

1)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들은 독·불 관계(Franco-German relations), 독·불 동반자 관계(Franco-German partnership), 혹은 독·불 협력 축(Franco-German Axis) 등이 있다. 3세기에 걸친 적대감은 세계 전쟁으로까지 번졌으나 1945년 이후 협력관계로 돌아섰다. 특히 양국은 유럽연합 결성과정에서 놀라운 정도의 조율과 공조를 보여줬는데, 이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유럽통합의 추동 요인 중 하나로 독·불 연합을 꼽고 있기도 하다. Laia Mestres(2002)를 참조할 것.

2) 독일 지도자들은 2차 세계대전 나치의 만행에 대해 끊임없이 사죄했다. 1970년 빌리 브란트 총리가 바르샤바 게토 기념비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이후에도 독일 지도자들의 사과는 계속됐고, 2005년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야드바셈 유대인 학살박물관 개관식에서 과거를 사죄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계획의 기둥의 하나이자 동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Tacel 1989, 1-2). 이에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지역통합을 구상하는 이들은 유럽의 경험을 적용시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해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최근까지도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의 지역 통합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바는 없다. 유럽과 달리 동북아시아국가들에게 있어서 지역 통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동북아시아 자유무역협정(NEA FTA, Northeast Asian Free Trade Agreement)과 같은 지역경제블록 구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 내 주요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는 동북아 자유무역협정(NEA FTA)이나 역내 경제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Lee and Park 2006).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영구불변의 것일 수는 없을 것이다. 지역경제블록을 추구하고 있는 전 세계적 추세를 고려했을 때 동북아 지역경제 역시 역내 경제블록 구성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Lee and Park 2006, 9).

본고는 동북아 지역 경제 협력과 관련해 유럽통합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검토하는 데 주목적을 갖고 있다. 특히 유럽통합 과정에서 추동력과 추진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독·불 연합으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유럽 통합의 역사를 개관하고 유럽공동체(EC)/유럽연합(EU)에서 독·불 관계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개관할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 통합을 검토할 것이며, 4장에서 동북아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독·불 연합의 역할로부터 몇 가지 가능한 교훈을 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5장 결론에서는 동북아에서 독·불 연합의 역할을 수행할 한-일 또는 중-일 연합이 동북아시아 자유무역협정(NEA FTA)을 포함, 동북아 지역 경제 통합의 기회를 만드는데 있어 주축 연합으로 이해될 만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주도적 역할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할 것이다.

## II. 유럽통합 과정에서의 독·불 연합

### 1. 역사(略史)

“프랑스는 가장 절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동반자이다. 유럽은 우리 독일과 프랑스의 절친한 동반자 관계, 즉 독·불 합의 토대위에 있다. 이 관계는 다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유럽 통합의 미래에도 적용될 것이다. 유럽 통합은 프랑스의 아이디어였다. 유럽통합을 명분으로 세 차례 전쟁을 치렀던 ‘철철티원수’ 독일과 힘을 합치는 프랑스의 정치적 용기와 전략적인 선견지명은 의미심장하다. 독일의 문제는 독일과 프랑스가 핵심으로서 수십 년 동안 조성해 왔었던 유럽 통합의 틀 내에서만 해결될 수 있었다. 따라서 독일과 프랑스는 동반자관계를 지속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실용적이면서도 보다 심원하고 역사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2001년 5월 31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행한 연방 장관 피셔의 연설 中)

EU의 근본적인 설립취지의 하나인 유럽의 안정과 평화, 독·불 동반자 관계 등이 최초로 반

영된 것이 1950년 5월 9일 발표된 슈망선언(Schuman Declaration)이다.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슈망은 장 모네(Jean Monnet)의 구상에 따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SCS)의 결성을 위한 선언에서 “유럽의 국가들이 한데 모이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독일의 구원(舊怨)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Leonard 1988, 4)고 주장했다. 모네의 구상은 역사적으로 전쟁의 근원지였던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사이에 집중해 있는 석탄과 철강의 생산과 관리를 초국가적인 성격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 기구인 ‘고위 관리청(Haute Autorité)’에 맡김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희구하자는 것이었고, 이를 유럽 통합의 초석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달리 말해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구원(舊怨)을 제거할 유일한 해결책으로 유럽 통합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sup>3)</sup> 이에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국가들을 포함한 6개국이 동조했고, 여기에 기초해서 1951년의 ECSC가 탄생했다. 이에 슈망선언은 ECSC의 토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독·불 연합의 토대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유럽공동체를 결성하게 된 취지의 하나는 국제질서를 유럽이 다시 주도할 기회를 찾겠다는 것이다. 국제 질서에 있어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강화하고, 그 강한 협상력을 통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발언권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 유럽은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치, 경제, 문화 등 많은 측면에서 세계 중심지로서 국제질서의 형성과 발전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미국과 구소련에 의해 밀리면서 유럽은 이 두 초강대국 사이에 전개되는 주도권 분쟁과 냉전 속에서 수동적인 지위가 되었다. 이에 유럽의 단결을 통해 과거의 지위와 영광을 회복하고 나아가 유럽인의 가치관에 입각해 세계질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신념이 유럽 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경제적 주도권을 잡는 것이었다. 실제로 EU는 모든 국제경제활동을 공동무역정책에 기초해 진행한다. 공동무역정책이야말로 EU가 단순한 자유무역지역과 구별되는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며, 역외 세력에 대한 협상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 EU는 이미 과도 기간 중인 1968년 7월에 관세동맹을 완성함으로써 공동무역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실현하였다. 대외 공동관세정책의 수립을 전제로 EU는 당시 GATT 테두리 내에서 진행중이던 케네디 라운드(1964~1967)에 당사자로 참여했다. 그 이후 EU는 도쿄 라운드(1974~1979) 및 우루과이 라운드(1986~1993)에 회원국을 대신해서 협상을 진행했으며, WTO DDA 국제협상에도 참여했다.

이러한 일련의 목표를 실현하는 유럽 프로젝트의 기동 역할을 맡았던 것이 독·불 연합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적 역할을 공유했던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주로 프랑스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때문에 60년대 중반까지는 독·불 연합의 추진력이 드러나지는 않았고, 프랑스가 주도하고 독일은 그저 프랑스의 제안을 수용하는 식으로 나타났을 뿐이었다. 하지만 프랑스가 유럽 설계의 주요 과정을 이끈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단독의 일방적 리더였다고 할 수는 없다(Handricks and Morgan 2001, 33-35).

또한 프랑스는 유럽통합을 주도하기는 했지만 초기에는 국제기구가 주권적 수단을 지니는 문

3) 1950년 모네가 제출한 각서는 석탄과 철강 산업 분야에서의 공동시장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 냉전 상태를 전쟁의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전쟁의 요인들을 제거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프랑스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상황의 본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독·불 관계의 새로운 정립이 매우 중요하며,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유럽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제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를 주저했다. 즉 프랑스는 유럽이 일체성을 갖추고 정치적 통합을 이루어 미국의 정치적 통상적 세력에 대응하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공동체 기구의 발전을 희생시키더라도 정부 간 협력을 선호하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독·불 양국 관계는 60년대 초부터 다자주의적 틀에서 발전되면서 유럽통합의 추진력으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드골과 아데나워와 같은 양국의 지도자들은 협력을 위한 양자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드골은 독일과의 화해와 협력을 재천명했고 이를 제도화한 독·불 연합에 관한 조약, 소위 ‘엘리제 조약’(Elysee Treaty)을 아데나워와 1963년 1월 22일 체결했다(Serfaty 1968, 134-135). 그 조약은 외교 정책에 있어서의 연대, 경제적·군사적 통합 그리고 교환 학생 프로그램 등 많은 협정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조약은 영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내의 야당들의 비판을 받는 등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 하에서 조인되었다(Cole 2000, 3-8). 독일의 경우 야당인 사민당은 독일의 통일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유럽통합정책에 반대했다(Sontheimer 1980, 228). 프랑스의 경우 유럽건설을 지원하는 미국의 저의가 통합된 제도를 통해 유럽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일지 모른다는 강한 의구심으로 반대가 있었다(Toulemon 1994, 32-33).<sup>4)</sup>

어쨌든 양국의 야당의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체결한 엘리제 조약은 유럽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많은 내용들에 합의를 했고 유럽 관계에 대해서 보다 공고한 독·불 연대 입장을 가져왔다. 비록 이 조약 체결이 즉시 유럽 통합을 도출해 내지는 못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유럽 공동체의 회원국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유럽 내에서 비중 있는 두 국가가 유럽공동체 회담 전에 정기적인 회담을 갖고 그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은 회원국들에게 협상하는 데 있어 힘을 실어주었고, 유럽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보다 큰 역량을 부여했던 것이다.<sup>5)</sup> 실제 유럽통합과정을 살펴보면 독·불 양국에 의해 유럽통합 과정이 진행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양국이 계획을 변경하면 유럽 통합 과정 역시 변경되던 침체기를 보면 잘 드러난다. 1963년에서 1974년 사이의 침체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기간에는 프랑스 드골의 독단으로 인해 갈등과 대립이 잦았다. 가령 영국 등 새로운 회원국의 가입과 관련해 프랑스의 반대는 다른 조약이나 제도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쳐 통합과정 전반이 지체를 겪어야 했던 것이다. 즉 새로운 회원국 가입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되어야만 가능한데, 드골이 갑자기 1963년 1월 14일의 기자회견에서 유럽공동체 신규가입 신청국들-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고 노르웨이-과의 협상 중단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영국의 공동체 가입을 봉쇄했던 것이다.<sup>6)</sup>

4) 야당의 주도적 인물이던 드골은 1958년 12월 대통령에 선출되기 전 야당 지도자 시절에는 유럽 국가들이 외부의 주도권 장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강한 통합을 이뤄야만 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그의 재임기간동안 유럽공동체는 내부적인 대립을 겪어야 하기도 했다.

5) 인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EEC-6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은 비중이 큰 회원국들이었다. 반면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는 비중이 적은 국가들로 간주되었다.

6) 이 때 드골은 표면적으로는 영국이 ‘공동체의 경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드골의 반대 이면에는 영국의 가입이 유럽공동체의 결집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유럽공동체가 미국에 예측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또 1965년 6월 30일에는 유럽의회의 예산심의권 강화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해 공동농업정책의 재정규칙에 대한 협상을 실패로 이끈 드골은 유럽공동체 주재 대사를 소환했고, 공동체 제도 특히 유럽경제공동체의 이사회에 불참하는 ‘공석정치’에 들어갔다. 이 공석 정치는 1966년 1월 30일 ‘룩셈부르크 타협’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유럽통합 과정에 있어서 프랑스의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침체기는 1974년 5월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Valéry Giscard d'Estaing)이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독일에서는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 수상이 내각을 구성하면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각각 양국의 재무장관을 지내면서 서로 친숙하게 알고 지내던 관계에 있었으므로, 유럽통합을 위해서도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 비록 농업분야에 있어서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독·불 협력관계가 유럽건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고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다시 맡아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그리고 실제 이때부터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관계가 다시 돈독해졌다. 가령 1974년 12월 9~10일의 파리 정상 회담에서 국가원수와 내각수반으로 구성된 유럽이사회가 종전의 정상회담을 대체하면서 정기적인 회합을 갖도록 한다는 데스탱 대통령의 제안에 슈미트 수상은 곧바로 적극적 지지 의사를 보였던 것이다. 유럽통합의 ‘독·불 엔진’이란 언급이 적절하게 된 것이 바로 그 때부터이다 (Mestres 2002, 2). 이후 독·불 관계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협상과 비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수상의 변동이 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데스탱(불)-슈미트(독)에서 슈미트(독)-미테랑(불), 그리고 미테랑(불)-콜(독), 콜(독)-시라크(불) 등으로 이어지면서 유럽연합 형성에 기여해 왔다.

이와 같은 독일과 프랑스의 양국관계는 그 결집도에 있어서 EU 회원국들 가운데서도 매우 독특하다. 양국 정부는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Summits)나 상임대표위원회(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와 같이 장관들과 지도자들의 공식적인 쌍무 회담에서든 양국 공무원들의 일상 접촉을 통해서든 늘 EC/EU에 관한 입장을 조정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러한 쌍무관계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유럽 통합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독·불 관계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다 돈독해지고 발전되었다.

## 2. 독·불 협력의 실제: 경제적 동맹, 정치적 동맹

협력을 제도화한 ‘엘리제 조약’으로부터 현재까지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통합을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양국 간의 견해차를 좁히려고 노력해 왔다. 물론 양국 간에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공동체의 제도적 문제나 앞서 언급했던 공동체 확대문제로 인해 내부적인 대립을 겪기도 했다. 가령 공동체의 제도적 문제와 관련해 독일을 비롯한 벨기에, 네덜란드는 공동체 위원회의 권력 강화와 다수결원칙을 통한 이사회 결정의 토대로 하는 정치적 유럽으로의 진전을 원했던 데 반해, 프랑스는 이러한 초국가적인 성격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던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1962년 4월 17일 개최된 파리 외무장관회담에서 프랑스가 유럽 정치연합 계획으로서 제출한 국가연합조약인 소위 ‘푸셰플랜’(plan Fouchet)에 대한 아무런 합의점도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Scottto 1994, 41).

이러한 갈등과 대립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도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1970년대 데스탱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협력 양상을 보였다. 독일과 프랑스는 확연히 다른 견해차조차도 좁히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역내 시장을 일본, 미국과 경쟁해 유럽 전역이 튼튼한 경제를 창출할 기회로 보았던데 반해, 독일은 유럽에서의 역내 시장을 생산품, 자본 그리고 서비스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신자유주의 철학의 이행으로 보았다. 특히 독일은 경제통화동맹(EMU)의 영역에서 ‘마르크의 유럽화’(Europeanization of Mark)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만, 안보와 국방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취약하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독일 측은 비판을 했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경제통화동맹이 민감한 문제인데다가 프랑스가 안보와 국방 정책의 영역에 있어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sup>7)</sup>

그러나 양국은 공동의 견해를 형성하고 함께 도모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했다. 특히 안보와 경제적 이슈들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었다. 가령 유럽통화제도가 1969년 12월 헤이그정상회담에서 경제통화동맹을 위한 계획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후 10년이 지난 1979년 3월 13일부터 운영될 수 있었는데, 이 10년 동안 양국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 우려가 있는 유럽경제를 잘 관리해야 했다. 즉 1971년부터 시작된 국제통화 위기, 1973년 달러화의 유동으로 인한 고정환율체계의 종말, 오일쇼크 등 악재가 계속되자 유럽경제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수 있고, 어렵게 도출한 유럽통화제도가 자칫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독·불 양국은 공동체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통화안정을 위한 제도를 모색하고자 했다. 당시 프랑화가 안정세를 회복하면서 상황이 호전되자 데스탱과 슈미트는 유럽을 경제적 곤경으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유럽통합의 재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1978년 회원국 간에 새로운 ‘유럽통화제도’를 위한 협정을 두 번에 걸쳐 맺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Toulemon 1994, 52). 정부 예산을 공고히 하는 것과 같은 재정 정책 역시 같은 목적에서 기획되었다.<sup>8)</sup> 게다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몇 년의 위기 동안 하락으로부터 경제적 이윤을 회복하기 위해 양국은 노동 비용의 상승범위를 동결해 성공했다. 독일과 프랑스 경제에서 정책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동안 양국의 거시경제정책의 전략 패턴은 놀랍도록 유사하게 움직였었다.<sup>9)</sup>

더욱이 역사적 관점에서 프랑스와 독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 영역은 당시 1960년대 전반기를 아우르는 농업이었는데, 그 기간에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e Policy)을 수

7) 이 문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자들을 보면, Christian Deubner가 1999년 9월 16일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회의 ‘Franco-German relations and European integration: A transatlantic dialogue’에서 제출한 “Food for thought in leftovers: France, Germany and the coming IGC on institutional reform,”와 전술한 Hendricks와 Morgan의 책 등이 있음.

8)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정책 및 체계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쟁은 Peter Hall, *Governing the Economy*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eater Hall and David Soskice, *Varieties of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2001)을 참조할 것.

9) 1991년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렸던 ‘Biennial Conference of the European Community Studies Association’에서 제출되었던 Jorg Boche의 논문 “The political economy of Franco-German relations: National strategies and cooperation in the European Community,”를 참조할 것.

립했다. 그리고 이러한 농업 무역 정책은 1990년대에 재조명되었다. 당시 EU는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무역 상대국들로부터 농업 보호 수준을 낮추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독·불 양국 정부가 위원회와 미국이 협상한 결과인 블레어 하우스 협정(Blair House accord)에 대해 난색을 표했고, EU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정책 결정 과정은 보류되었다. 이에 1993년 9월 이사회 회의에서 독일 정부는 나머지 ‘찬-블레어 하우스’ 회원국들과 위원회를 상대로 프랑스 정부에 대한 지지를 촉구, 끌어냈다. 이 독·불 중재는 블레어 하우스 협정의 개정으로 EU가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가져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에 유럽 정치에서 독·불 관계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과장은 아니다.

독·불 정부는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 있어 협력을 하고 있다. 가령 양국은 독·불 산업 동맹의 거대 기업들을 합병하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실제 통합된 독·불 기업들은 가령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sup>10)</sup>, 에어버스 등은 세계의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불 연합은 경제-재정 부문뿐만 아니라 정치-안보 영역에 이르기까지 공동 정책 부문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했다. 1970년대 유럽 경제가 어려울 때 양국의 주도적 역할에 힘입어 창설된 유럽이사회는 점차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기구로 자리 잡으면서 유럽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양국은 유럽통합에 관한 공동 유럽 정책을 관리했다. 양국에 의해 진전된 유럽 공동체는 1980년대 후반 냉전체제가 종식되자 유럽단일화의정서에 설정된 목표들에 대해 발전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양국은 이를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을 했는데, 1990년 4월 28일 미테랑과 콜은 유럽 건설을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해 공동서한을 발표하게 되었으며, 12개 회원국의 정치적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간 회담을 동시에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Toulemon 1994,288-289). 이를 토대로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경제적 통합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정책과 내무·사법업무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는 정치적 통합까지를 목표로 하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유럽공동체는 유럽 연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동체의 공유 영역은 점차 외교안보정책에까지 확대해 나갔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라크 전쟁이다. 독·불 연합이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외교 정책에 반대하며 공동전선을 펼 것이다. 하지만 이들 두 국가가 유럽에서 새로운 안보 협정에 대한 새로운 단계에 동의하면, 한편으로는 중요한 정치적 진보가 실행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유럽의 동반자 국가들은 독보적인 독·불 연합에 대한 우려가 뒤따랐다. 실제로 유럽연합군(EuroCorps, 유럽 전역에 공동 군사 협력)<sup>11)</sup>을 창설하자는 독·불의 제안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반응이 그랬다. 그 제안

10) 유럽항공방위우주사업은 유럽의 큰 항공우주 기업이다. 2000년 7월 10일 독일의 다임러크라이슬러 항공우주 AG(DASA)와 프랑스의 Aerospatiale-Matra 그리고 스페인의 항공안전본부(CASA) 등이 합병됨으로써 만들어졌다. 이 회사는 미사일, 우주선 발사로켓, 위성 그리고 관련된 체계들뿐만 아니라 민간 항공공기와 군용 항공기 등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11) 유럽군의 창설은 1963년 1월 22일 프랑스 대통령 드골과 독일 수상 아데나워가 조인했던 엘리제 조약의 결과로 간주될 수 있다. 독·불 관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 이 조약에서 양국은 국방 부문을 협력하도록 한다고 했다. 보다 가까운 정치적 관계와 별도로, 양국은 각각의 군대 병력의 교류와 국방 산업 부문에서의 협

은 1992년까지 다른 인접 국가들의 우려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지만 새로운 정치 환경에서 안보 정책의 재민족화(re-nationalization)를 피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함께 가야 한다는 전략적 정치적 가정이 있었기에 폐기되지는 않았다. 독일과 프랑스는 인접 국가들에게 양국은 유럽 안보의 안정적/평화적 상태를 보장하기 위해서 늘 함께 할 것이고, 유럽을 위해 함께 일할 것임을 확신시키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성과가 있어서, 다른 유럽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Gordon 1993, 152-153).<sup>12)</sup>

### III.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 협력

1952년의 ECSC, 1958년의 EEC의 창설, 그리고 EC, EU 등 통합을 향한 유럽 국가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비교했을 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국가간 협력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다 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지역협력에 대해 논의가 시작된 것도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와서인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여건 변화 때문이다(김세원 2005, 101-107).

우선 1997~1998년의 동아시아 외환·금융위기는 관련 당사국들로 하여금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위기의 원인이 국내 경제운영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투기성 국제자본의 이동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반성에서 국가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특히 많은 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의 운영이 가져 온 부작용을 절감했다. 따라서 지역 내 독자적인 금융·통화협조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가졌다.

실물 부문에서도 단순한 국가간 협력보다는 FTA와 같은 수단을 통한 실질적인 시장확대의 모색을 꾀하게 했다. 이에 EU의 ‘역내시장 완성’이나 NAFTA의 출범은 국가간 시장 통합을 다른 국가의 ‘일’로만 여기던 동북아 국가들에게도 시도해 볼 사례로 다가왔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WTO 내에서 지역무역협정(RTA)의 체결이 급속하게 확대되었는데,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FTA 정책의 추구는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의 산물이었다.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뒤늦게 FTA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국가별로는 공통적으로 FTA의 우선 대상지역으로 ASEAN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다면 동북아 3개국간 상호 경제의존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FTA 대상지역을 역외지역에서 찾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제외적인 요인들 때문이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이 FTA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는 미국의 정책적 선회와 무관

---

력을 계획했다. 1987년에 미테랑 대통령과 콜 수상은 프랑스와 독일간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1991년 이후 운영되는 독·불 여단의 창설을 허용하는 독·불 안보군방 이사회 구성을 선언했다. 1991년 10월 14일, 양국 정상은 공동서한으로 유럽 이사회에 의장에게 이러한 군사적 협력 강화 의도를 알렸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WEU 회원국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럽 군단(European army corps)의 토대를 마련했다. 1992년 5월 22일의 La Rochelle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미테랑 대통령과 콜 수상은 독·불 국방장관의 공동 보고서를 채택함과 동시에 유럽군 창설에 대한 공식적 결정을 내렸다. 유럽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유럽군의 공식 웹사이트인 [http://www.eurocorps.net/history/eurocorps\\_history/](http://www.eurocorps.net/history/eurocorps_history/)을 참조하기 바란다.

12) 1993년 11월 5일에 프랑스, 독일, 벨기에 3국은 유럽군단을 정식으로 발족시켰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NAFTA의 창설은 물론 FTAA를 추진하고 있고, 미주 이외의 수많은 개별국가들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 및 일본이 전개하고 있는 FTA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단시일 내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적극적인 대외경제전략의 전개가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이나 동북아 시장통합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 통합이 영향력 있는 '국제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가 미국이 중심이 된 NAFTA나 EU와 비교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질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총규모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갖춰야 하고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만 비로소 협상력을 행사하고 흐름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중국이나 일본이 독자적으로 미국이나 EU와 같이 국제경제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협상력을 가질 수는 없다. 한국, 일본, 중국이 한 단위로 통합되었을 때 비로소 초강대 경제권들과 총체적으로 비교될 수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은 미국과 EU와 함께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다.

표 1. 동북아 3국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구성비(2003년)

구분	인구(억명, %)		실질GDP(10억달러, %)		무역(백만달러, %)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동북아	14.8	23.6	7,071	20.9	2,457	15.2
EU	3.8	6.1	8,195	24.4	5,563	34.2
NAFTA	4.3	6.8	11,766	35.0	2,839	17.4
기타	39.7	63.5	6,647	19.8	5,400	33.2
세계	62.5	100.0	33,617	100.0	16,276	100.0

자료: DRI-WEPA Global Insight's World Overview, 김세원, 앞의 책, p.105. 재인용.

표 2. 동북아 3국 경제전망(2003년)

구분	인구(%)		실질GDP(%)		무역(%)	
	2003	2025	2003	2025	2003	2025
동북아	23.6	20.9	20.9	21.8	15.2	22.3
EU	6.1	5.0	24.4	19.5	34.2	33.0
NAFTA	6.8	6.6	35.0	34.7	17.4	19.6
기타	63.5	67.5	19.8	24.0	33.2	25.1
세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DRI-WEPA Global Insight's World Overview, 김세원, 앞의 책, p.105. 재인용.

또한 여기에 더해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요소의 하나는 동북아 3개국 간에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어야 한다. 단순히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크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EU의 경우에서 보듯이 역내 상호의존적인 성장이 요구되며, 국가간 상호의존의 정도는 경제 통합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은 WTO에 가입(2001)한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즉 중국은 일방적인 개방과 같은 수세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시장 확대를 취지로 하는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2002년 중국·ASEAN간 체결된 특혜무역협정(PTA)이 그 한 예이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동북아 3국 간 정부차원의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 준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동북아시아 3개국 사이에 경제통합은 물론 FTA 추진을 위한 하등의 공식적인 정부간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단지 1997년 ASEAN 회원국들이 경제협력을 주제로 3개국 정부 정상을 초청한 확대모임을 계기로 이 테두리 내에서 1999년부터 한국, 중국 및 일본 정상들이 별도로 정기적인 연례 경제회담을 갖기 시작했다.<sup>13)</sup> 그러나 불행하게도 2005년 12월 일본 총리가 한국과 중국이 반대하는 신사 참배를 고집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계획된 동아시아 정상회담(EAS, East Asia Summit)이 결렬되고 협력 논의는 중단되었다. 이 당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C-J-K FTA, China, Japan, and Korea Free Trade Agreement)의 공동 위원회는 이미 자유무역협정이 한·중·일 3국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최종 보고서까지 발간되었지만, 협상은 재개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여섯 차례 한·일간의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했지만, 한·일 FTA(J-K FTA)가 실질적으로 진척된 것은 없었다. 중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경제 협력에 관한 어떤 논의도 어려웠다. 그래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GATT/WTO와 같은 다자 기구를 통해서만 경제 협력을 도모해 왔다.<sup>14)</sup> 그러나 WTO에 따르면 동북아시아를 제외한 WTO 회원국 거의 대부분이 지역 무역 블록들에 참여하고 있기에,<sup>15)</sup>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과 학자들은 계속해서 한·일 FTA 논의를 시작으로 한국, 중국, 일본 간 지역 FTA 체결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까지 몇몇 중국 경제학자들이 삼자간 FTA를 제안하기도 했다. 아이디어를 냈던 중국학자들은 여전히 입장에 변함이 없는 듯하다.<sup>16)</sup>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소(DRC, Development Research Center), 일본의 종합연구개발기구(NIRA,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 그리고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00년 11월 경제 협력에 관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연구팀은 2002년 3차년도 연구과제로 ‘한국, 중국 및 일본 3개국 간 FTA에 관한 공동연구’를 정했다. 건의 형식으로 제안된 이 연구과제는 같은 해 3개국 정상회담의 간사국인 중국 정부에 전달했다. 당시 주룽지 총리의 제안에 따라 이 연구과제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동의함으로써 3개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 그 후 보고서도 발간되었다.

13) 한, 중, 일 3국 정상회의는 일본 오부치 수상의 제안으로 1999년 ASEAN+3 정상회담과 연계하여 처음 개최되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일본은 ASEAN+3 협력에 대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했으며, 한, 중, 일 3국 협력에도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다. 이후 한, 중, 일은 3국 정상회담을 정례화 하였으며, 2003년에는 3국간 최초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3자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3국 협력을 공식화, 제도화하였다.

14) 보다 자세한 내용은 Jong-Won Lee and Sung-Jo Park (eds.),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New trends and perspectives* (Berlin: LIT Verlag, 2006); Karl-Peter Schonfisch and Bernhard Seliger (eds.), *ASEAN plus three (China, Japan, Korea)-towards an economic union in East Asia?* (Hans Seidel Stiftung, 2004)을 참조할 것.

15) WTO, *Focus Newsletter* (December 2000), p.14.

16) 하이 웬(Hai Wen)와 장 시(Zhang Xi) 두 교수는 3국간 FTA를 제안했고 안강 후(Angang Hu) 교수는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홍콩간의 FTA를 제안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에서 경제 통합에 대한 움직임은 몇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아시아 금융 위기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및 재정 부문에 있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일본의 경제 후퇴와 국내 경기 하락의 대응책으로서 지역 통합을 모색하는 것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경제 협력을 자극하고 있다. 셋째,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관세의 두드러진 감소, 최근 인접 국가들의 중국 수출을 방해하는 비관세 장벽의 제거, 서비스 부문의 개방 그리고 지적 재산권의 보호 강화 등 수많은 정책 변화를 동반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의 국제화와 개혁 정책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 통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IV. 독·불 연합으로부터의 교훈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 가능성이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한, 중, 일 3개국 사이에는 상품은 물론 생산요소이동을 제한하는 경제적 장벽이 무수히 많다. 물론 중국이 WTO 가입국의 의무를 따르고 이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는 협상에 참여함에 따라 역내 무역에서 관세는 점차 보호적 성격이 약해질 것이다. 문제는 3개국이 각각 실시하는 다양한 비관세조치의 구체적인 측면이다. 상품뿐만 아니라 금융 및 통신과 같은 서비스 이동을 대상으로 하는 비관세조치들의 대부분이 국내 경제정책이나 제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3국간 정책적인 협조를 필요로 한다.

잠시 조성되었던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 협력은 그 추동력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표류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EU 통합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 일본, 중국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공식 보고서(Cheong et al. 2003, 270)에 따르면, 한·중·일 FTA 추진에 있어 장벽들로 과도한 무역 경쟁, 정치 체계의 차이, 중-일간의 주도권 다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장벽들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다.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동안 한·중·일 3국은 이러한 이슈들을 다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유럽 통합의 경험 특히 독·불 주도권/연합의 역할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본다.<sup>17)</sup>

물론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역사적 배경이나 인식, 경제규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럽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유럽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독·불 연합으로부터 배울 교훈은 있다고 본다.

17) 파샤(Werner Pascha, 2003)와 같은 다른 연구자들도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위해 유럽 통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강조했다. (이는 2003년 12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SEM 연구원에서 개최한 ASEAN plus three in the light of European integration: the valuable lessons에서 파샤가 발표했던 논문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and Europe: A compared,"을 참조할 것.) 파샤에 따르면 흥미로운 점은 표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출발 조건과 정책결정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른 통합 메커니즘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EU는 높은 정도의 역내 경제 활동을 제안하면서 역동성과 경우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투자해 통합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발전시켰다.(Pascha 2003, 41)

이에 유럽통합 과정에서 배울 점을 간추려 보면, 첫째, 몇 차례의 전쟁을 치른 양국이 ‘화해의 접근’을 통해서 통합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독일은 전범국가로서의 명예를 벗어던지기 위해 기회가 되는 대로 인접 유럽 국가들에게 사과를 했다. 동북아 지역 내의 국가들이 지역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이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대한 사과를 통해 화해와 협력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독일이 가장 부유한 국가로서 공동체에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경제적 기여를 한 것이다. 이에 한국과 일본 등 경제력이 큰 국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동북아에서의 경제 통합은 결국 동남아연합체인 ASEAN 주도가 아닌 동북아의 경제력 거인들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주도 하에 이뤄져야 하며, ASEAN(+3)은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프랑스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줬고 독일은 재정적으로 프랑스의 주도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일본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넷째, 독일과 프랑스는 협상의 원칙 소위 ‘주고받기(give and take)’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섯째, 지도자들 간에 매우 긴밀한 사적 관계를 통해 독·불 관계가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헬무트 콜과 프랑시스 미테랑은 긴밀한 상호 교류와 감정 교류를 즐겼다. 그들은 종종 만나서 그들 자신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여섯째, 양국의 지도자들은 필요하다면 국가적 수준과 공동체 수준에서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줬다. 일곱째, 독일과 프랑스는 전체적인 통합 과정에 걸쳐 자국 수준의 이익을 좇기보다는 공동체 수준의 이익을 증가시키려 했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인접 국가들을 긴밀한 유럽통합으로 설득할 수 있었다.

흔히 동북아 지역 경제통합을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의 하나는 동북아에서는 유럽의 경우처럼 유럽통합과 관련된 구상이나 제안들이 유럽지역의 역사의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해 오지는 못했고 사회적 가치나 문화, 정치제도 등에 있어서 동질성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 지역 국가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는 가치관이나 문화가 있다. 물론 유럽의 경우에 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동북아 지역에도 소위 유교문화라는 공동의 문화를 갖고 있다. 이를 토대로 서로 이해하거나 타협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상당한 정보로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북아시아는 경제규모 면에 있어서도 1인당 GNP가 30,000달러를 초과하는 유럽과 다르다. 또한 유럽 국가들은 자원이 풍부한 국가나 부족한 국가 간의 차이가 기술 수준으로 극복될 수 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의 주요국으로 뽑히는 중국의 1인당 GNP가 여전히 대략 1,000-1500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제 규모에서 벌써 대조가 되고, 일본만이 풍부한 천연자원과 세계 상위 클래스의 첨단기술과 산업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한, 중, 일은 세계화, 좀더 구체적으로는 국제 거래의 자유화에 힘입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일찍이 서구화에 나섰으며, 전후 수출을 통한 고성장으로 선진경제의 호경기와 함께 진행된 국제무역의 덕을 보았다. 한국 역시 급속한 공업화로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 역시 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시장경제는 국내에서 경제발전을 가져온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하나의 공통적인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역사가 짧을 뿐이며, 동북아에서의 시장경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다 더 발전가능성이 열려 있다 할 수 있다.

## V. 결 론

1940년대 후반 유럽통합이 추진되기 시작한 초기 조건을 중심으로 두 지역을 비교할 때 기본적인 차이는 동북아시아에서는 유럽식의 절실한 ‘필요’와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럽 내에서는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유럽통합’의 필요성이나 의의가 논의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정부 수준에서 여러 기회에 걸쳐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했었다. 한마디로 ‘유럽통합’을 추진해야 할 동기나 비전이 확실했고 이와 관련해 유럽내 여론의 흐름은 물론 주도세력도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인들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럽통합의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유럽 내 전반적인 통합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분위기가 상당한 수준 성숙해 있었던 상황에서 경제통합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할 수 있다.

반면 동북아 지역에서는 동북아 통합의 ‘필요’나 ‘의지’를 심어주고 주도할 세력이 없었다. 경제 통합 논의 자체를 북돋울 수 있는 필요의 하나는 동북아 3개국을 한 단위로 할 때 GDP 및 무역규모, 외환보유고, 부존자원 등은 물론 성장잠재력으로 미루어 세계경제에서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경제권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북아시아 경제적 협력과 통합을 위해 국가들이 해야 할 것이 많다. 그러나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지’를 심어주느냐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일을 할 국가가 한국일 수 있다고 본다. 중국과 일본이 경쟁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 상황에서 한국은 중재자 역할을 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둘째, 몇 가지 점에서 독일로부터 배워야 할 국가가 바로 일본이라고 본다. 양국이 유럽의 경험들(예를 들어 독·불 연합)을 동북아시아에 적용할 수 있다면, 한·일 FTA 체결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한·일 FTA가 상호 이익이 되고 통합의 효과가 다른 양자 FTA보다 커질 것이라고 이미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일 FTA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동북아시아에서의 가장 실현가능한 대안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일 FTA에 토대를 둔 한·일간 협력은 향후 한·중·일 FTA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 FTA(NEA FTA)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중국 역시 경제개혁이 보다 적극적이 되고 시장경제의 문을 더욱 열게 됨으로써 한국과 일본을 따를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한, 중, 일 3국의 통합(예를 들어 한·중·일 FTA나 NEA FTA)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지역 평화를 보장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동북아시아 경제 통합의 기회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유럽에서 독·불 연합은 한·일 또는 한·중·일 연합의 유형으로 아시아에서 재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경제 통합의 추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 (또는 중국과 일본) 이 독·불 화해의 사례를 교훈 삼아 주도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독·불 협력체제와 유사한 동아시아 양국협력체제는 동북아 각국에서 적절한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경제개혁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또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외부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세원(2005). 『동북아 시장통합은 가능한가: 유럽경제통합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Alistair Cole(2000). *Franco-German relations*. London: Pearson Education.
- Dick Leonard(1988). *Guide to the European Community: The original and definitive guide to all aspects of the EC*. London: The Economist Books.
- Gisela Handricks and Annette Morgan(2001). *The Franco-German axis in European integration*. London: Edward Elgar.
- Inkyo Cheong et al.(2003). *A China-Japan-Korea FTA: current progress and tasks*. Seoul: KIEP.
- Jong-Won Lee and Sung Jo Park (eds.)(2006),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New trends and perspectives*. Berlin: LIT Verlag.
- Karl-Peter Schonfisch and Bernhard Seliger (eds.)(2004). *ASEAN plus three, (China, -towards an economic union in East AsiaJapan, Korea)?*. Seoul: Hanns Seidel Stiftung.
- Kurt Sontheimer(1980). *Grundzüge des politischen System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ünchen: Piper.
- Laia Mestres(2002). "The Franco-German motor before the Eastern enlargement: the causes of its decline." *Institut Universtari D'estudis Europeus Working Paper*, No. 33.
- Marcel Scottto(1994). *Les institutions européennes*. Paris: Eds. Le Monde.
- Max Tacer(1989). *La France et le monde au XXe siècle*. Paris: Masson.
- Peter Hall and David Soskice(2001). *Varieties of Capitalism*.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eter Hall(1986). *Governing the Economy*.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hilip Gordon(1993). "The Franco-German Security Partnership." in *Patrick MaCarthy (ed.), France-Germany 1983-1993*. London: Macmillan Press.
- Robert Toulemon, *La construction euroéenne*, Paris: Eds. de Fallois, 1994.
- S. Serfaty(1968). *France, de Gaulle and Europe*.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 WTO, *Focus Newsletter*, December 2000.

Abstract

# Towards China–Japan–Korea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Lessons from the Franco–German Coalition in Europe –

Sang–Hee Jeong\* · Jong–Won Lee\*\* · Ki–Sik Hwang\*\*\*

This paper seeks to draw some useful implications from the European integration case for the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uthors believe that establishing close relationship between two key major players (i.e. French–German coalition)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successful EU integration process, and suggest to make similar coalition among East Asian key countries, such as between Japan–Korea and China–Japan. In conclusion, it suggests that coalition between two key players would take a leading role in terms of creating a chance for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including Northeast regional FTA.

■ 논문접수일 : 2010년 4월 10일, 논문심사일 : 2010년 4월 18일, 게재확정일 : 2010년 4월 20일

---

\* Graduate School of Northeast Asian Studies, Dong–A University

\*\* College of Economics and Business, Department of Trade, University of Suwon

\*\*\* Graduate School of Northeast Asian Studies, Dong–A University